정부 · 지자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 고심

최근 전기차 화재 잇따라… 정부의 전기차 행정 관련 반성과 문제점 조사 · 분석 필요 여론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각 부처 국장과 과장들이 참여하는 전기차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고, 13일에도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각 부처가 준비하는 대책에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국무조정실의 전언이 있다.

논의에 앞서 정부의 전기차 행정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1일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작성한 '주차장 안전 등 연구 보고서'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 지상층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 회의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차·충전시설 보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TF)에도 지상 설치 의무화를 고려했으나 제도 개정 추진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국가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전기차·충전시설 보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어려워서 제외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공공행정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집행하느냐가 국민의 삶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전기차 보급이라고 하니 마치 자동차 회사 사장이 할 만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화재 사고가 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공행정의 우선순위를 모를 리는 없고 자동차 회사의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왜 밧데리 결함으로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을 듣는 전기차에 대해 그동안 엄청난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를 강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회나 감사원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있음을 도외시하고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처럼 행동하는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광주 남구는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3개월 전 청사 지하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통째 이전해 선견지명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11일 건물에 머무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도 지하에 설치돼 있던 전기차 충전기를 잇따라 지상으로 이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고 지난 6월에는 전기차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도 12일 관내 공영주차장 33곳 중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차구획이 설치된 23곳에 화재 대응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12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사업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고, 건물 노후 정도, 소방차 등 접근 용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완속 충전기 15기(1기당 300만원)를 지원 예정이다"라며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지하 충전 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상 이전이 공동 주택 3~4단지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정진 효자추모관 회장 등이 저소득 폐지 수거 어르신 74명에 14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효자추모관, 폐지 수거 어르신 후원

총 74명에 148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기부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정진 효자추모관 회장 등이 저소득 폐지 수거 어르신 74명에 14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효자추모관 관계자들은 연일 35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전주시 저소득 폐지 수거 어르신을 돕고 싶다는 뜻을 담아 기부활동에 동참했다.

이에 시는 효자추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20만원권 74매)을 폐지수거 어르신(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한 효자추모관은 평소에도 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직원이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진 효자추모관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나눔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다할 것"

인후동 간이정류소 · 소공공원 물놀이시설 · 무더위쉼터 찾아 현장 점검

연일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2일 인후동 간이정류소와 우아동 소공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우 시장은 진안·장수·무주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동부권 시·군을 오가는 인후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찾아 냉방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살피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다.

이어 우아동 소공공원에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인근 무더위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폭염이 끝날 때까지 간이정류소 10개소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내 물놀이장 8개소와 무더위쉼터 561개소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2일 인후동 간이정류소와 우아동 소공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또한 계곡 및 하천, 여름철 지역축제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폭염 3대 취약 분야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농촌마을 고령층 위주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과 예방조치 홍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폭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여름철 폭염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며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행정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일 것"이라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복무 수범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총 6건을 발굴해 대상 직원들에게 1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민 편의 향상'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

전주시설공단, 복무 수범 우수사례 공모전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표창했다. 공단은 복무 수범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총 6건을 발굴해 대상 직원들에게 1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체육시설 이용 현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소방 행정 체계 확립,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공사 추진, 마을버스 차량돌봄센터 구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수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심사평가와 인트라넷을 통한 공개투표를 거쳐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공단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복지포인트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본보기로 삼고, 적극적인 복무자세 확립으로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지역자활센터, 식재료 관리사 자격과정 교육 실시

자활참여 주민에 올바른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하)는 지난 9일 우렁각시, 가족애찬, 한입푸드사업단 등으로 도시락 제조 및 반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자활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사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활참여 주민들에게 식품위생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식중독세균 및 화학물질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식품 위해요소를 파악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갖춰 근로뿐만 아니라 직무에 맞는 자격증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35명의 자활참여 주민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식재료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옥기 기자